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9.1.(화) 9월 1주차 (제26-48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통상) 美 ITC, 중국 PNTR 철회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 분석 ····· 2
- (행정명령) 美 '벌크전력시스템 국가비상상태 선포' 주요 내용 및 현지반응 ····· 6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자국 생산 촉진을 위한 반도체 관세 적용 범위 확대 검토 ····· 10
- (관세) 美 민주당, 338조 폐지·관세 환급 법안 'BAD DEAL Act' 추진 ····· 11
- (의약품) 트럼프 행정부, 9개 제약사와 최혜국(MFN) 약가 추가 합의 ····· 12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바이오산업, 관세 등 관련 입법 2건 ····· 13
- (행사) Peterson, ITIF 행사 2건 ····· 13

이 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4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5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9.2(수)	• 美 연준 베이지북 공개(Federal Reserve Beige Book)
9.3(목)	• 美 7월 상품·서비스 무역수지 발표(U.S. Trade Balance)
9.4(금)	• 8월 고용보고서 발표(Employment Report)
9.8(화)	• 美 8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발표(NFIB Index of Small Business Optimism)

(통상) 美 ITC, 중국 PNTR 철회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 분석

- 중국 PNTR 전면 철회 시 미국 내 가격·생산비용 상승으로 실질산출 감소 전망
- 대중국 수입 감소분은 미국산과 제3국산으로 대체되며, 대한국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일부 국가안보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초기 가격·수급 충격 완화 전망

1. 개 요

□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Effects on the U.S. Economy of Revoking China's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Status」

• 2026 회계연도 세출법안 관련 하원 세출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PNTR 지위* 철회가 미국 내 가격·생산·교역 및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

* 미국이 특정 국가의 제품에 일반적인 최혜국 관세율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적 지위

-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2002년부터 PNTR 대우를 적용받아 왔으며, 철회 시 중국산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적용

□ 보고서는 PNTR 철회의 적용 범위와 시행 속도에 따라 전면·즉시 철회와 단계적 관세 인상 두 시나리오를 검토

• 중국산 전체 품목의 관세율을 일괄 조정하는 경우와 일부 국가안보 품목의 관세를 5년에 걸쳐 인상하는 경우를 구분해 분석

- (1) 전면·즉시 철회 : 중국산 전 품목을 한 번에 Column 2 세율로 전환
- (2) 단계적 인상 : 일부 국가안보 품목(NSP)의 관세를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

• 본 보고서는 PNTR 철회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분석으로, 정책 시행 여부는 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2. 상 세

□ (전면 철회) 중국산 전체 품목의 PNTR 지위를 즉시 철회할 경우, 일부 산업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 중간재 비용 상승으로 미국 실질산출은 감소

• 전면 철회는 중국산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하나, 대중국 수입 비중과 관세율 상승 폭이 큰 제조업에 영향이 집중

- PNTR 철회 시 중국산 제조업 제품의 관세율은 일반관세율(Column 1)에서 비PNTR 국가에 적용되는 Column 2로 전환돼, 단순평균 28.8%p 상승할 전망

- 이에 따라 전자제품·배터리·컴퓨터·통신장비·완구 등 중국산 완제품과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담이 확대될 전망

- 완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사용하는 부품·원자재·기계의 가격도 상승해 경제 전반의 생산비용과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PNTR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6년 차 소비자·중간재 가격은 각각 1.0%, 1.2% 상승하고 실질산출은 0.3% 감소할 전망

-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완구·가전·배터리·통신장비 등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 상승이 생산증대 효과를 상쇄

- 장기적으로 대체 조달과 생산 조정이 진행되면서 가격 상승 폭은 축소되나, 실질산출과 수출은 기준선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

〈중국 PNTR 전면 철회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

구분	1년 차	6년 차	장기
소비자 가격	+0.8%	+1.0%	+0.7%
중간재 가격	+1.0%	+1.2%	+0.8%
실질산출	-0.4%	-0.3%	-0.2%
총수출	-0.1%	-0.8%	-2.7%
총수입	0.0%	-0.5%	-1.8%
대중국 수입	-6.5%	-30.8%	-73.8%

* 2023년 기준선 대비 변화. 장기는 경제가 정책 변화에 완전히 적응한 이후를 의미

** USITC는 Column 1·2 간 세율 차이로 관세 충격을 산정했으며, 301조·232조 등 추가관세는 제외

[자료: USITC]

• **조달 전환 시 대중국 수입 감소분은 미국산·제3국산으로 대체되며 전체 수입 감소보다 공급망 재편이 두드러질 전망**

-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6년 차 30.8%(1,409억 달러) 감소하지만 전체 수입은 0.5%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

- 미국산은 조달 증가액이 가장 크고 대만·베트남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한국산 조달도 69억 달러(5.3%)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다만, 대한국 조달 증가분의 품목별 구성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중국 PNTR 전면 철회 6년 차 미국의 주요 공급처별 조달 변화〉

공급처	조달액 증가	증감률
미국(국내 출하)	2,059억 달러	+0.6%
멕시코	183억 달러	+3.6%
대만	125억 달러	+12.6%
베트남	124억 달러	+10.4%
캐나다	70억 달러	+1.5%
한국	69억 달러	+5.3%
일본	69억 달러	+3.4%

* 2023년 기준선 대비 변화. 미국은 국내시장 출하액, 나머지 국가는 미국의 해당국산 수입액 기준

[자료: USITC]

• **수입선 다변화에도 품목별 공급망에서는 중국과의 연계가 지속될 가능성**

- 통신장비 등 일부 전자제품은 최종 조립이 중국에서 베트남·인도 등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중국산 중간재를 계속 사용하는 구조

- 한국·대만산 첨단반도체도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수입국 변경만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즉각 낮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 **(단계적 인상) 일부 국가안보 품목의 관세를 5년에 걸쳐 인상할 경우, 즉시 인상보다 초기 가격·수급 충격이 완화될 전망**

• **USITC는 배터리·컴퓨터·통신장비 등 6개 국가안보 품목 산업을 대상으로 즉시 인상과 5년 단계적 인상의 효과를 비교**

- **단계적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이 생산능력을 확충할 시간을 제공해 시행 초기의 급격한 가격·수급 변화를 완화**

  - 분석 대상 6개 산업의 1년 차 가격·미국 내 출하·수입 변화 폭은 동일 품목에 관세를 즉시 인상하는 경우보다 평균 약 3분의 2 축소

  - 이에 따라 관세 시행 초기의 가격 상승과 공급 조정 부담이 분산될 것으로 분석

- **다만 관세가 모두 적용되는 5년 차에는 가격·미국 내 출하·수입 영향이 즉시 인상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

  - 단계적 인상은 관세의 최종적인 영향보다 산업의 초기 조정 속도와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3. 반응 및 시사점

□ PNTR 철회의 경제적 영향 추정을 둘러싼 USITC 내부 이견 제기

- **브렛 도일 위원장과 제이슨 컨스 위원은 별도 추가의견에서 보고서가 철회 비용을 과대평가하고 편익은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2023년 교역구조에 기반한 전면 철회 분석이 최근 대중국 수입 비중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규 투자·관세수입 등의 편익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

□ PNTR 철회 효과는 분석상 한계와 품목별 공급망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

- **보고서는 노동시장 마찰을 반영하지 않아 단기 조정 부담을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지역별 차이와 중국의 보복조치도 분석에서 제외**

- **한국산 대체 조달 가능성은 확대되나, 실제 영향은 최종 생산·조립지와 중국산 투입재 의존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김예나
▪ 자료원	International Trade Today(8.26), 인사이드(8.26), 美 국제무역위원회('26.8)

(행정명령) 美 '벌크전력시스템 국가비상사태 선포' 주요 내용 및 현지반응

- 美 국가안보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 외국산(우려대상국) 제조·공급 벌크전력시스템(BPS)의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제한
- 에너지부, 120일 내 세부 시행규칙 공표·180일 내 연방조달규정(FAR) 개정 권고안 제출 예정

1. 개 요

□ **트럼프 대통령, 美 벌크전력시스템 안보강화를 위해 우려대상국과 연계된 전력기기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8.26)

• **(조치 배경) 美, 우려대상국이 美 벌크전력시스템(Bulk-Power System)의 취약점을 이용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국가비상사태 선포***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국가비상사태법(NEA)에 근거한 행정명령(EO 14420)

- 첨단 제조업·데이터센터·AI·방위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벌크전력시스템 취약점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전력공급망 강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첨단 제조업 신설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망 확보의 중요성 강조

- **(안보 취약성 대응)** 외국산 전력기기에 내장된 사이버 백도어* 등 보안 위협 및 지속적인 외국산 전력기기 의존에 따른 공급망 취약성 대응

* 숨겨진 원격접근 경로로 해외에서 원격으로 장비를 조작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음.

• **(핵심 조치) 우려대상국 개인·기관과 연계된 벌크전력시스템 전력기기 관련, 행정명령에서 명시된 안보 위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금지**

- 트럼프 1기 벌크전력시스템 관련 행정명령(EO 13920)*은 중국산 대형 전력 변압기에 국한됐던 반면, 이번 조치는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 행정명령에서 벌크전력시스템이 악의적 사이버활동을 포함한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경제·국민 건강과 안전·국방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20.5)

- 이번 행정명령에서 우려국(Covered Foreign Entity)*으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현지 업계·언론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

*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상 금수 제재 대상국 또는 에너지부 장관이 안보·외교상 유해 행위국으로 판단한 국가

2. 상세 조치 내용

□ 구매·수입·이전·설치뿐 아니라 원격접속·유지보수·업데이트 등 운영 관련 서비스까지 포함, 공급망·사이버·운영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차단

• (대상) 전력 시스템 신뢰성(electric system reliability)* 유지에 필수적인 69kV 이상 고압 송전망 및 연결된 발전·저장 설비를 주요 대상으로 지정

* 전력 시스템이 정전·전압 불안정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 **(적용 시점) 신규 거래 금지는 '26년 8.26.부로 개시된 거래부터 적용**

* 기취득·설치 장비 및 기존 계약·허가는 소급 규제 대상으로 명시(격리·제거 등 조건 부과 가능), 단 신뢰성·안전성·대체재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이행 허용

- **(적용 범위)** _ '26년 8월 26일 이후 신규 BPS 전력기기*의 취득(Acquisition), 수입(Importation), 이전/양도(Transfer), 설치(Installation) 등 거래 전반

* 우려국에 소유·통제되거나 그 지시를 받는 자에 의해 설계·개발·제조·공급된 전력기기로, 에너지부 장관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거래를 대상으로 금지

-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69kV 이상 송전망 관련 설비, 변압기·계통연계형 인버터·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발전기·산업제어시스템(ICS) 등을 포괄

* △지역배전시설, △벌크파워시스템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품목은 제외

<거래 금지 적용 대상 전력기기>

구분	포함되는 주요 장비·서비스
전력 송전·변전	리액터, 축전기, 전류결합축전기, 션트커패시터 장비, 결합용량전압변압기, 변전소 변압기, 변전소 전압조정기, 고압차단기, 자동회로재폐로기, 계기용변성기, 보호계전장치, 계량장비
발전·저장장치	발전터빈, 대형·소형·비상 발전기, 유틸리티급·계통연계형 인버터,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핵심인프라 지원용 무정전전원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산업제어시스템(원격단말장치·PLC·지능형전자장치 포함), 분산제어시스템, 안전계장시스템

[자료] 백악관 행정명령 원문

• (거래 금지 판단 기준) 에너지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거래에 한해 금지

- ① **(거래 당사자)** 외국(국가 불문) 또는 그 국적자가 해당 거래의 대상 재산(공급계약상 이익 포함)에 이해관계를 보유
- ② **(기기 출처)** 해당 장비(핵심부품·SW·펌웨어·원격접속 기능 포함)가 우려국이 소유·통제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자에 의해 설계·개발·제조·공급된 것으로 판단
- ③ **(위험 요건)** 에너지부 장관이 해당 거래가 아래 위험 중 하나 이상 유발로 판단할 경우 ‣고의적 방해·무단접근·원격조작·공급차질 위험 ‣핵심인프라·경제 파국적 영향 위험 ‣기타 국가안보상 용인 불가 위험

• (기타) 예외 조항·우회방지 장치 마련 및 사전 승인·완화 경로는 별도 마련

- **(사전적격·예외조치)** 에너지부 장관은 특정 설비·공급업체를 사전적격 '화이트리스트(Whitelist)'로 지정*·공표하고, △금지 대상에서 제외, △완화조치 협상, △라이선스 발급을 통해 개별 거래에 대한 예외 허용 가능

  * 화이트리스트 지정 이후에도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보유

- **(우회방지)** 우려국(Covered Foreign Entity) 연계 장비임을 은폐하기 위한 우회거래 구조(제3국 경유, 명의 변경 등)를 시도 할 경우 별도의 위반행위로 간주

3. 현지 반응

□ 현지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 업계는 시장 혼선 및 공급망 차질 우려 제기

• (언론) 이번 조치가 미국의 對中 기술안보 대응 조치의 연장선으로 평가

-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중국 인버터 배제 결정에 이은 워싱턴의 대중(對中) 기술 위협 대응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평가(로이터)
- 중국산 변압기와 제어 장비의 원격 조작·사보타주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對中 규제 신호탄으로 평가(월스트리트저널)

• **(산업계) 우려국 공급망 차단에 따른 시장 혼선 및 연계 차질 우려**

- 이번 조치를 트럼프 1기 행정명령의 갱신·확대판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시장 혼선 가능성을 지적(美 전기제조업협회(NEMA))

- 초고압 변압기 등 핵심 기기의 리드타임이 이미 3~4년에 달해, 우려국産 차단 시 조달 병목 및 인프라 구축 비용 증가 불가피(Edison Electric Institute)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계통연계형 인버터 및 BESS 수급 차질 시, 미 국산화 전까지 계통 연계 지연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태양광산업협회(SEIA))

- 이미 설치·주문된 장비의 유지보수·소프트웨어·원격관리 규제 포함에 따라, 기존 설비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격리·교체 부담 우려

• **(싱크탱크·컨설팅) 적격 동맹국 기회 전망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조**

- 이번 조치가 단순 하드웨어를 넘어 펌웨어·유지보수 채널 등 '디지털 제어 생태계' 전반으로 안보 심사 범위를 확대한 점에 주목(CSIS)

- 우려국산 저가 전력 설비 거래 금지로 인해 한국, 일본 등 우방국 전력 기자재 제조 업체들에게 美 시장 내 대체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아시아소사이어티)

- 에너지부가 공표할 세부 시행규칙 상의 사전 적격 공급자 목록 등 구제 절차와 연방조달규정(FAR)개정 권고안 발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강조(Akin Gump)

〈행정명령(8.26) 후속 향후 일정〉

기한	내용
서명일부터 120일 이내	우려국 지정 기준, 우려국 연계자 식별 방법, 라이선스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세부 시행규칙 공표
서명일부터 180일 이내	국가안보 위험을 반영하고 미국산 에너지 인프라 우선구매를 담은 연방조달규정(FAR) 개정 권고안을 FAR위원회에 제출
연방조달규정(FAR)권고안 접수 후 90일 이내	해당 개정안의 규정공고·의견수렴 절차 회부 여부 검토

[자료] 연방관보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행정명령(8.26), 팩트시트(8.26). 연방관보(8.31)

미국 경제통상 동향

(관세) 美, 자국 생산 촉진을 위한 반도체 관세 적용 범위 확대 검토

- **美 상무부, 반도체 탑재 완제품으로 관세 적용 대상 확대 논의**

- 자국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반도체 및 노트북·게임 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 탑재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논의

※ 미 행정부는 '26.1월 일부 첨단 AI 반도체에 제232조 관세 25%를 부과하되 데이터센터·연구개발용 등은 제외했으나, 이번 검토안은 대상 품목 확대와 기존 예외 축소 가능성 검토

- **미국 내 생산 투자 연계 무관세 수입쿼터·국가별 차등 적용 방안 모색**

- **(관세 구조)** 해외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계획에 비례해 일정 규모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국가별 적용)** 주요 생산국별로 관세율과 수입쿼터를 별도 설정하고, 해당국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세부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논의

- **(예외·시행)** 데이터센터·연구개발·스타트업·소비자·민간 산업·공공부문 등에 대한 기존 용도별 예외의 축소·폐지 가능성과 신규 관세의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 현재 미 행정부 내 비공개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관세율·적용 대상·시행 시점 등은 미확정

- **미 관련 업계, 조달 비용 상승 및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우려**

-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돼 단기적으로 아시아 공급망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AI 수요 대비 미국 내 첨단·메모리 반도체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시, 반도체·서버 가격 상승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축소 우려

- 해외 위탁생산에 의존하는 미 반도체·전자제품 기업의 비용 부담과 가격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데이터센터·연구개발용 관세 예외 유지 요구

▪ 자료원 | 폴리티코(8.26), CNBC(8.27)

(관세) 美 민주당, 338조 폐지·관세 환급 법안 'BAD DEAL Act' 추진

- **민주당은 8.27(목) 1930년 관세법 338조*를 폐지하고 동 조항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환급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BAD DEAL Act'를 발의**

* 338조: 외국의 대미 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상 권한

- 하원 세입위 슈나이더(민주, 일리노이) 의원과 상원 재무위 웰치(민주, 버몬트)·길리브랜드(민주, 뉴욕) 의원 공동 발의

- 법안은 ①338조 폐지 ②동 조항에 근거한 대통령 포고 무효화 ③기존 집행된 관세 환급을 위한 행정부의 조치 의무화를 규정

- 트럼프는 지난 7월 캐나다의 대미 주류·자동차·유제품 규제에 대응해 338조에 근거 포고 3건을 통해 **200억 달러 이상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예고**, 지난주 협상 결렬로 효력 개시, **캐나다는 이에 대응해 9.8(화) 발효 예정인 보복관세를 발표**

- **이번 법안은 최근 민주당의 연쇄적 관세 견제 입법 시도의 연장선**

- 지난달 와이든(민주, 오리건) 상원 재무위 간사가 발의한 338·122조 폐지 및 232·301·201·203조 관세에 대한 의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발의

- 슈나이더·베이어 의원 등은 지난 3월에도 '상호 관세' 대체 추진 방지를 위해 338조 폐지 법안을 지지한 바 있음

-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전례가 있어, 338조 관세 자체에 대한 별도 사법적 판단 여부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

-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 구성 △전원 민주당 의원 주도 발의라는 정치적 한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입법 전망은 불투명

▪ 자료원 | 인사이드(8.28)

(의약품) 트럼프 행정부, 9개 제약사와 최혜국(MFN) 약가 추가 합의

- **백악관은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주요 선진국의 최저 가격 기준으로 낮추기 위해 9개 제약사와 추가 MFN* 가격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8.31)**

  * MFN 가격 합의 및 미국 내 생산 요건 충족 시 의약품 관련 232조 관세를 '29.1.20.까지 0% 적용

- 이번 합의 대상은 중견 제약사 9개 사*로 기존 합의 기업을 포함한 MFN 합의 제약사는 총 26개 사로 확대되고 미국 브랜드 의약품 시장의 89%를 포괄

  * Alcon, Astellas Pharma, BeOne Medicines, BridgeBio, CSL, Kyowa Kirin, Sun Pharma, Teva Pharmaceuticals, UCB

- 9개 사는 미국 내 모든 州 Medicaid에 MFN 가격을 제공하고, 신약에도 적용해 중증·만성·희귀질환 치료제의 비용 절감을 기대

- **美 정부는 MFN 약가 인하와 연계해 미국 내 제약 생산 확대 및 핵심 원료 비축을 추진하는 등 의약품 공급망의 자립성 강화에도 중점**

- 9개 제약사는 미국 내 제조시설에 최소 196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부 기업은 핵심 의약품 원료(API)를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제도(SAPIR)에 기부할 예정*

  * UCB: 레베티라세탐 : 163톤, Sun Pharma: 클린다마이신 71.4톤·독시사이클린 6.75톤, Teva: 메트로니다졸 45톤·암로디핀 4.8톤, Astellas: 타크로리무스 25kg

-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MFN 합의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6,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전망

〈MFN 정책 행정명령 후속 조치〉

시점	주요 내용
'25.5.12	MFN 정책 행정명령 발표
'25.9월~10월	Pfizer, AstraZeneca 등 총 5개 사와 MFN 약가 합의
'25.12월	Amgen,Genentech 등 총 9개 사와 MFN 약가 합의
'26.1월~4월	Johnson & Johnson, AbbVie 등 3개 사와 MFN 약가 합의
'26.8월	Alcon, CSL 등 총 9개 사와 MFN 약가 합의

[자료] 美 백악관 팩트시트('26.8.31)

▪ 자료원 | 백악관 팩트시트(8.31)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바이오산업 (8.27)	H.R.10164 (하) (8.27)	Robert Latta (공)	〈미국 생물제조 경쟁력 강화법 (BEDROCK Act)〉 ▪ 美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생물제조 경쟁력 제고, 핵심 생물제조 투입재 및 국내 생산능력 관련 공급망·상업화 취약성 파악, 그리고 연방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법안
관세 (8.27)	H.R.10175 (하) (8.27)	Bradley Schneider (민)	〈구식 관세 폐지 및 공정한 미국 관세 확립법 (Banning Antiquated Duties and Delivering Equitable American Levies Act, BAD DEAL Act)〉 ▪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폐지하고, 해당 조항에 따라 부과된 특정 대통령 포고문의 관세·부과금을 무효화하는 법안

* 9월 1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Peterson	9/10(목) 11:00 am	〈Mary E. Lovely on what's really going on with global supply chains〉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연구와 미국의 '상호주의' 무역협정, 그리고 과거 미국 관세 정책의 교훈을 검토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을 논의	링크
ITIF	9/11(금) 9:00 am	〈2026 Global Trade and Innovation Policy Alliance Summit〉 ▪ 9월 11일 폴란드 워샤 대학교 본교 캠퍼스에서 열리는 공개 컨퍼런스로, 혁신정책·인공지능·첨단제조 분야의 주요 과제와 기회를 논의하며 국제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행사	링크

* 9월 1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rump Administration Steps Up Immigration Crackdown on Truck Drivers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트럭 운전기사 단속 강화…20여 개 주 소송)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트럭 운전기사 구금과 운전학원 약 300곳 폐쇄 등 단속 수위를 높인 가운데, 운전자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20여 개 주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요구를 일시 중단
The Washington Post	At least 80 people rescued after Grand Canyon flash flooding; one is unaccounted for (그랜드캐니언서 돌발홍수로 2명 사망…80명 이상 구조)
	미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서 폭우로 돌발홍수가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80명 이상이 구조됐으며, 당국은 현재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조사 중
The New York Times	Meta to Pay Up to $17.1 Billion in Landmark Settlement Over Social Media Addiction Claims (메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서 최대 171억 달러 지급 합의)
	메타는 자사 플랫폼의 중독성 기능으로 소송을 제기한 47개 주 등과 합의해 최대 171억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이용시간·알림을 제한할 예정으로, 관련 조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
Reuters	Trump administration seeks to restrict intern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인턴십 취업허가 제한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교과과정 실무훈련(CPT) 요건을 강화해 유학생의 재학 중 인턴십을 학위 과정에 포함된 경우로 제한하고, 규정 위반 대학은 유학생을 받을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
USA Today	House to vote on funding to avoid government shutdown before Election Day (미 하원, 중간선거 전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 표결)
	미 상원이 9월 30일 예산 만료에 따른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현행 예산을 1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을 90대 6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이르면 9월 1일 표결할 예정

* 미국 동부 시간 9월 1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29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2026.8월
US26-28	美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및 소송 동향	2026.8월
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6.8월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2026.7월
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2026.7월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